



#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

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손동희 분석관

## 농축수산물 관련 물가 및 기여도 상승세

▪ 최근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안정·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,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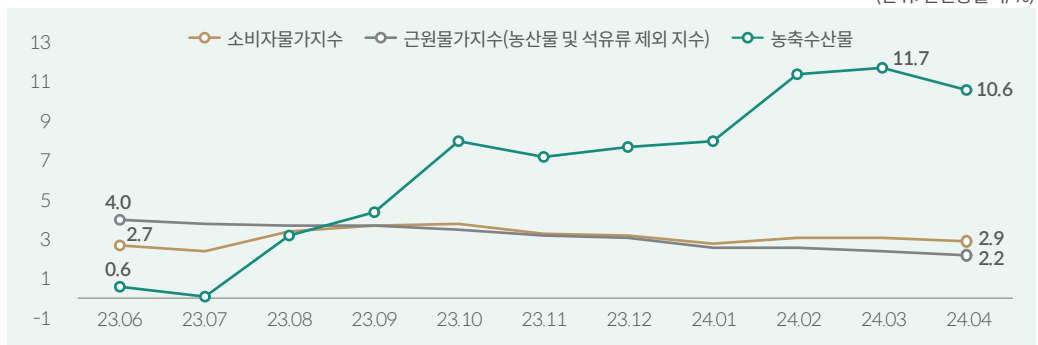
- 소비자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): ('23.6월) 2.7% → ('24.4월) 2.9%
- 근원물가상승률<sup>1)</sup>(전년동월비): ('23.6월) 4.0% → ('24.4월) 2.2%
-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): ('23.6월) 0.6% → ('24.4월) 10.6%
  - 다만, '24.3월 11.7%에서 '24.4월 10.6%로 일부 둔화

▪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기여도는 증가 추세

- 전체 물가 상승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기여도<sup>2)</sup>는 '23년 6월 0.01%p에서 '24년 4월 0.77%p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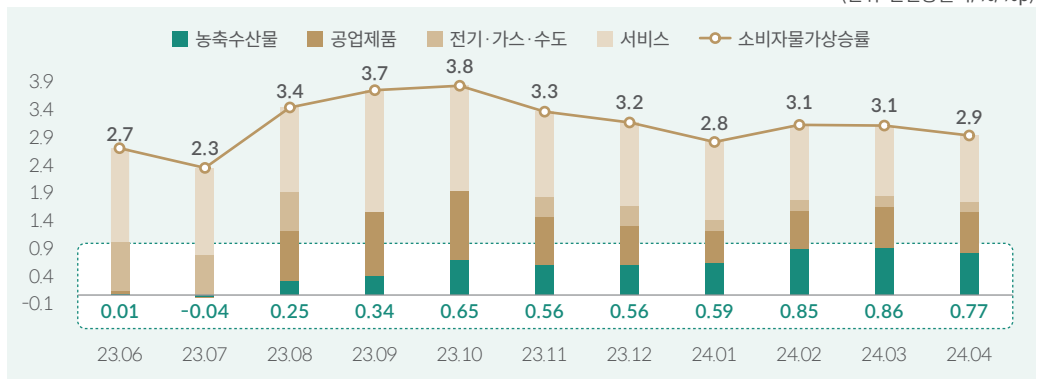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

(단위: 전년동월비, %)



[그림 2] 품목별 기여도 추이

(단위: 전년동월비, %, %p)



주: 코로나-19가 경제단계로 낮아진 '23년 6월 이후부터 작성

자료: 통계청, 「소비자물가동향」

1)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

2) 기여도는 개별 품목의 변동이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  
소비자물가상승률 = 개별 품목 기여도의 합

기상여건 악화  
등으로 인한  
과실·채소류 중심  
물가상승

- 최근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은 과실류와 채소류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냉해·호우, 일조량 부진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에 기인
  - 과실류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): ('23.6월) 2.2% → ('24.4월) 38.7%
  - 채소류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): ('23.6월) 3.6% → ('24.4월) 12.9%
    - 사과 출하량('24년 3월 기준): 전년 대비 31.7% 감소
    - 대파 출하량('24년 4월 기준): 전년 대비 23.5% 감소

최근 우리나라  
식품 부문  
물가상승률이  
OECD 평균을 상회

- 최근 식품 부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OECD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
  - '24년 2월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부문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OECD 전체 평균(5.32%)보다 높은 6.95%를 기록
  - 동 부문의 OECD 전체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,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<sup>3)</sup>

[표 1] 우리나라와 OECD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부문 물가 추이

(단위: 전년동월비, %)

구분	'23.6.	'23.9.	'23.12.	'24.1.	'24.2.	추이
한국	4.47	5.51	6.19	5.92	6.95	증가세
OECD 전체	10.37	8.59	6.74	6.25	5.32	감소세

자료: OECD, 「OECD headline inflation stable at 5.7% in Feb. 2024, food inflation continues to slow」, Statistics News Release, 2024.4. 및 OECD Statistics 자료(검색기준: 2024.4.28.)를 바탕으로 재작성

정부는 농축수산물  
가격안정을 위해  
다양한 시책을  
추진중

-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, 채소가격안정지원, 자조금 지원 등의 재정사업과 함께 할당관세 정책을 병행 추진 중<sup>4)</sup>
  -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가격 상승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가격을 할인해주는 사업
  - 채소가격안정지원과 자조금 지원 사업은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  - 할당관세 정책은 수입관세를 낮추어 수입을 촉진하여 가격안정을 유도

[표 2] 농축수산물 물가 대응 주요 사업 및 대책

구분	사업 내용('24년도 예산액)
농축수산물 할인지원	•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입 시 할인 지원 (농축수산물 1,080억원, 수산물 1,338억원)
채소가격안정지원	• 계약재배 농업인의 수급조절(가격차보전, 사전면적조절, 출하장려)을 통해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·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(552억원)
자조금지원	•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농축수산물 판로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 (농축수산물 353억원, 수산물 41억원)
할당관세	• 수입관세를 낮추어 수입을 촉진하여 가격안정을 유도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

3)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'24년 3월의 경우 기상호전 및 긴급가격안정대책 추진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부문의 물가상승률은 6.66%로 일부 둔화

4) '24년 3월부터 「농산물 긴급가격안정 대책」(납품단가 지원, 과일직수입(할인공급), 할인지원, 축산물할인 등)을 1,500억원 규모로 추진 중

물가상승에 취약한  
저소득층 중심의  
정책 시행 필요

▪ 저소득계층의 경우 전체 식품 지출비 중에서 농축수산물(특히 채소, 곡물) 지출 비중이 높아 물가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 참고 필요

- 1분위 가구의 경우 농축수산물 소비지출 비율이 31.8%로 상위 분위 대비 농축산물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물가상승에 더 취약

[표 3] 소득분위별·품목군별 소비지출 비율

(단위: %)

분위	식품 지출비(합계=100)			농축수산물(소계=100)					
	가공식품	외식	농축수산물	곡물	채소	과실	기타	축산물	수산물
1	27.4	40.8	31.8	11.5	22.4	16.9	6.3	28.3	14.6
2	26.8	50.2	23.0	9.6	18.9	19.5	4.1	34.5	13.4
3	24.5	52.4	23.1	9.0	18.8	18.8	5.0	34.2	14.1
4	26.1	52.3	21.7	8.9	18.5	19.2	4.4	36.1	12.8
5	28.2	48.9	22.9	7.7	18.1	19.0	4.2	37.9	13.1
6	25.9	53.0	21.0	7.5	16.8	19.4	4.7	38.3	13.2
7	26.4	52.2	21.4	7.1	16.3	21.0	3.1	39.9	12.6
8	27.7	50.7	21.6	6.6	15.7	20.8	3.8	40.3	12.8
9	26.4	51.5	22.0	6.4	15.7	22.2	3.6	39.0	13.0
10	25.3	53.2	21.5	5.9	15.1	23.3	4.4	39.1	12.2

자료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「농식품 물가 이슈, 진단과 과제」, 2024.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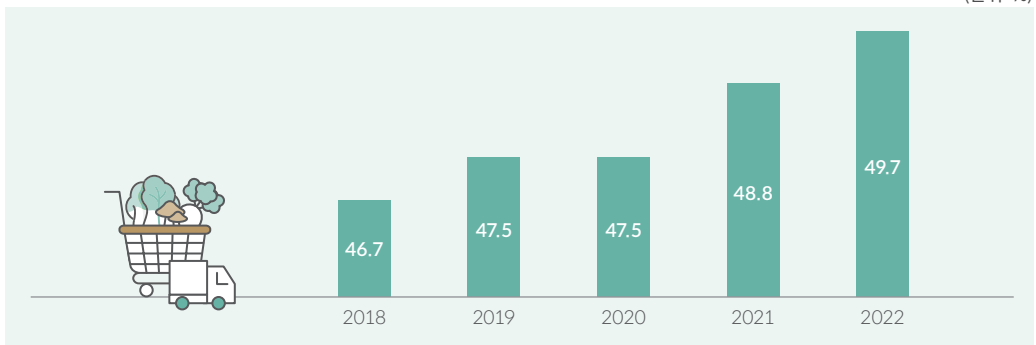
농산물  
유통비용률  
상승억제 노력 필요

▪ 농산물의 유통비용률이 상승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,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필요

-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'18년 46.7%에서 '22년 49.7%로 증가 추세

[그림 3] 농산물 유통비용률 추이

(단위: %)



주: 유통비용률은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

자료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「2022년 유통실태 종합」, 2024.1.을 바탕으로 재작성

-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('23년 11월 공식 출범)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오프라인 공영도매 시장 중심의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

• 다만, '24년 거래금액 5,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4월말 기준으로 402억원 수준이고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정책추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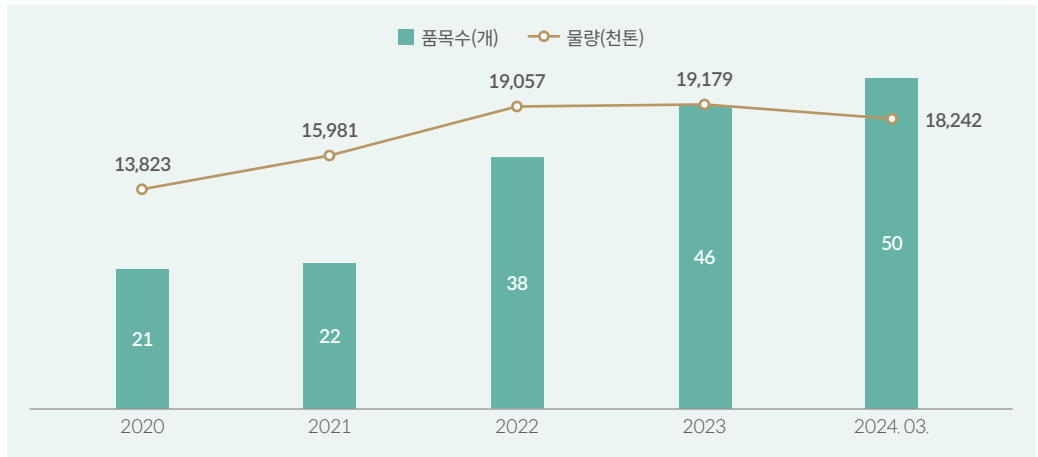
5) 2023년 3월 발의된 「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2120844)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며, 현재 규제샌드박스 대상(실증특례)으로 지정·운영 중

반복되는  
할당관세정책은  
농축수산물  
생산자의 자생력  
약화 우려

▪ 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 증량 등의 수입 증가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반복 시행

- '20년~'24년 3월 기간 중 농축산물 할당관세 대상 품목수와 물량은 증가추세
- 할당관세의 경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일시적 가격안정화에는 기여하는 측면
- 다만,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·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

[그림 4] 농축산물 할당관세 운영 현황



주: 계획 기준  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

채소가격안정지원,  
자조금 등  
생산자 자율  
수급안정 사업  
활성화 필요

▪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자율적으로 농축수산물 판로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

- 생산자의 자율적 농축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주요 사업인 채소가격안정지원과 자조금 사업 등의 사업성과 제고 필요
- 채소가격안정사업의 가입률과 계약재배 물량 대비 조절물량 비율이 낮고 연도별로 저하되고 있으므로, 실질적인 수급안정 등 효력 발생을 위해 가격차보전·사전면적조절·출하장려 등 조절기능 강화 필요
  - 농가가입률('23년): 배추(0.8%), 무(1.2%), 마늘(5.4%), 양파(6.0%), 고추(0.3%)
  - 계약재배 물량 대비 조절물량의 비율: ('20년) 27.2% → ('23년) 10.6%
- 자조금의 경우 소비홍보나 교육 및 정보제공 등보다 수급안정, 유통구조개선, 경쟁력제고 등에 대한 사용 확대 필요
  - 농산물자조금 사용 비중('23년): 소비홍보(27.8%), 수급안정(26.1%), 교육 및 정보제공(12.1%), 유통구조개선(2.0%), 경쟁력제고(6.7%)